



너릿재 옛길 야생 숲에서 ‘더위 탈출’ 산림청으로부터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화순 너릿재 옛길에서 27일 오후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산책을 하고 있다. 편백나무와 소나무 등이 어우러진 이 숲길에서 오는 8월 15일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현대백화점 광주 재입점 추진... ‘빅3 혈투’ 예고

〈신세계·롯데·현대〉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 인근 1만3200㎡ 부지 매입 나서

2013년 폐점 2년여만에 ... 지역 유통업계 지각변동 촉각

지난 2013년 폐점했던 현대백화점 광주점이 다시 입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측이 광주점 재 입점을 염두에 두고 신축부지 물색에 나섰다. 최근에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있어 광주 재입점 의지가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의 모 증권건설업체는 최근 현대백화점 측으로부터 견본주택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팔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대 관계자들이 찾아와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했고, 현재는 의견이 맞지 않아 조율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 측에서 매입을 논의했던 부지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신세계백화점과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직선거리로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지고 있다. 1만3200㎡ 정도로 백화점 부지로는 협소한 감이 있지만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위한 대지를 확보한다면 백화점을 짓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땅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 본사는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입점이든 재 입점이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라면서도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유통업계

가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 입점 후보지로 신세계백화점 인근이 거론되자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펼쳐야하는 광주신세계측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대상 후보지가 협소해 사업적 측면에서 백화점 입점이 효율적일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서도 “지난 15년간 광주에서 영업하면서 북구를 중심으로 한 상권에서 영업이익을 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 재진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2013년 철

수한 현대백화점의 복귀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현대백화점이 광주에 재진출하면 지역 유통가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1998년 송원백화점과 10년간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해 광주점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2008년 이후에도 매년 계약을 연장해 총 15년간 영업을 이어왔으며, 2013년 송원백화점이 경영위탁계약(OMA)을 종료하고 ㈜이랜드리테일과 장기계약으로 NC광주역점 입점이 확정되면서 문을 닫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살기 좋아”

복지정책 평가 대도시보다 점수 높아

우수 지자체-광주·서구·전남 영암·전북 순창

광주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된 지역은 서구, 전남에서는 영암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좋은 대도시 지자체보다 복지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서(김승권, 김태완, 신정훈)에 따르면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에서 중소도시의 기초 지자체는 100점 만점 중 평균 75.53점을 받았다. 이는 농어촌 기초 지자체의 평균 점수인 73.06점, 대도시 기초 지자체의 평균인 71.85점보다 높은 것이다.

복지정책 평가는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재활사업 활성화 정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보육기반 조성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과 관련한 25개 지표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도시 5곳, 중소도시 5곳, 농어촌 지역 6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대도시 중에선 광주 서구를 비롯한 대전 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우수 지자체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남 영암군과 경기 연천군, 충북 단양군, 강원 고성군, 전북 순창

군 등이 각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초 지자체에 대한 복지정책 평가는 지난 2006년 처음 실시됐다. 복지부가 보사연에 의뢰해 평가를 진행하다가 2009년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돼 실시되고 있다. 보사연 보고서는 “같은 지역에서도 기초지자체간 평가 점수의 격차가 컸다”면서 “국민의 생활 여건이 좋지 않고 ‘저성장-저고용’의 신사회 위협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르스 격리자 ‘0’ 사실상 종식 선언

정부, 오늘 대국민 메시지

메르스 격리자가 첫 환자 발생 68일 만인 27일 ‘0명’이 됐다. 앞서 광주와 전남은 지난 19일을 기해 메르스 관리 대상자의 격리 조치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그동안 메르스로 격리됐다가 해제된 사람은 모두 1만6693명으로, 인구 5100만명 기준 국민 3000명당 1명이 격리됐던 셈이다. 격리자는 0명이 됐지만, 방역당국에 의해 메르스의 영향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아직 12명이 남아있다. 이 중 11명은 2차례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완치됐지만 후유증 치료와 거저질한 치료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완치되어 나오고 있어 아직 메르스 감염 상태에 있는 환자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연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계획이지만,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 선언 시점은 이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아 환자가 1명도 남지 않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8일이 지난 뒤 정식으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민간 의료단체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도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의견을 모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

복지부 장욱주 차관은 “아날 4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국무총리 주재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국가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뉴스, 세계를 연합하다!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 연합뉴스는 전 세계 83개 뉴스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60여명의 해외 취재망과 6개 외국어 뉴스 서비스를 통해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